

## 전환기의 한국경제와 방위산업



朴宇熙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제 세계질서는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기술패권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과학기술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파악하는 기술국가주의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로이 형성되는 **신군사기술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의 국가적 당면과제라 할수 있으며, 기술개발을 선도 하는 방위산업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조명**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의 경제는 대단히 큰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수출과 수입은 세계 13, 14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교역량도 전세계의 2%를 차지하게 되었고, 소련·중국·동구권 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및 UN가입 등으로 국제적 위치도 상당히 높아 졌습니다.

우리는 '50년대의 농업국가에서 최근의 공업기술력을 확보하기 까지, 또 '60년대 후반기에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민간연구기관의 설립으로 많은 기술을 활용했지만 필요기술은 주로 선진국에서 도입이나 모방연구를 통해 습득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경제 및 기술의 권력화에 따라 지역국가간의 협력에 배타적 기술보유국가들은 기술과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기술보호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술도입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무역마찰에 따른 기술의 무기화 경향은 기술 도입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고, 높은 기술도입비에 의한 자본비용은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저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교역량을 확장해서 세계무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등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해야합니다.

21세기를 가늠하는 지금, 우리는 대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변혁을 이끄는 주체는 인간이지만 변혁의 방법으로서의 도구는 과학기술이 초가 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산업사회의 추진력은 한나라의 기술개발 능력에 귀착됩니다. 끊임없이 변천되는 상품의 수요에 대응해서 신제품의 개발, 신산업의 유발, 품질향상과 제품공업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기술개발체제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 3년간 실로 엄청난 변화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개혁과, 개방, 화해, 군축, 평화공존 등과 같은 용어로 대변되어지는 이른바 신화해라고 특징지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해서 세계의 정치, 군사 분야에서는 평화주의와 낙관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많은 사람이 냉전의 시대가 지나가고 화해의 난 기류가 지구촌 전체를 덮게 될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칼을 쟁기로」라는 신질서를 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국제분야에서 지역적 안보환경도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년간 목격했듯이 한·소 국교 정상화, 한·중 무역대표부의 개설, 남·북한의 UN 동시 가입, 4차에 걸친 총리회담 개최, 불가침 상호 교환과 협조 등 4개항의 일괄 타결안의 합의등과 같은 괄목할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안보상황은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한국의 안보를 저해할수 있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한 예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군사적인 잠재역량 때문에 한국의 위협인식은 결코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해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군사적 대결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중의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대결의 실질적 종식을 나타내는 통일을 달성할때 까지의 국가안보는 물론 통일 이후의 미국, 소련, 중국 및 일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군사력 건설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걸프전의 교훈을 분석, 도출하고 우리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향후 통일 이후의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알맞는 방위체제를 구상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키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연구개발 정책이며, 이는 반드시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발전을 극대화 함에 그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국제사회와 국제정치의 전환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의 기반이었던 이념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기술패권주의가 대신 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군사기술이 깊이 개입하고 있고, 과학기술이 국가관계에서 경제적 격차 및 국가적 격차 까지도 낳고 있습니다.

서방으로 부터의 표절을 바탕으로 했던 소련의 기술이 미국의 우주방위계획(SDI)과 같은 비약적인 기술혁신에 좌절할 예가 국가적 격차를 낳는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SDI를 시발하면서 동시에 대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과학기술의 보호주의와 공산권에 대한 기술이전을 차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에 의한 국가적인 격차는 「세계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볼때 이제는 이념적인 대립을 벗어나 기술패권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종의 기술에 국주의적인 성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파악하는 기술국가주의를 낳고 있다고 말할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은 여태껏 군사기술의 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기술 패권적인 성격은 군사기술과의 연결을 통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국가정책에서 과학기술의 정책성과 전략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요청되고 있으며, 새로이 형성되는 세계질서 가운데서 신군사기술질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국가적인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이점에서 국가전략으로서의 방위산업 기술 개발전략은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하나로 재조명되어야 하겠습니다. \*